

전국 학교 냉·난방기 3대 중 1대가 '고물'

설치 30년 넘은 냉·난방기 운영교도 12.4% 서동용 "교육교부금 축소 전 환경개선부터"

전국 초·중·고와 특수학교 등에 설치된 냉·난방기 3대 중 1대 이상이 교체주기에 12년을 넘겨 낡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지난 8월22일 기준 '전국 초·중·고·특수·각종학교 내 냉·난방기 설치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1만2241개 학교에서 총 131만 7758대의 냉·난방기가 운용 중이었다. 이 중 교육부가 제안한 교체 주기인 12년을 넘긴 냉·난방기가 전체 3대 중 1대 이상인 47만9382대(36.4%)였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냉·난방기 내용연수는 9년, 온풍난방기와 냉방기는 각 10년이다. 내용연수만 어떤 설비의 사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기간으로 교육부 교체연수가 조달청 기준보다 더 길다는 것이다.

운영하지 않고 있는 냉·난방기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실제 노

후 기기는 더 많을 수 있다.

교체주기를 넘긴 냉·난방기 운용 대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북이 3만2171대로 전체 6만2284대 중 51.7%를 차지해 노후화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 48.4%, 서울 46.0%, 대전 44.7%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교대나 사범대 부설학교, 국립 특수학교 등 국립학교의 냉·난방기 노후화율은 63.8%로 특히 심각했다.

학교급별 노후화율은 초등학교가 38.1%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36.3%, 특수학교 31.7%, 고등학교 27.8% 등 순으로 조사됐다.

설치된 지 30년이 넘는 냉·난방기(1만1550대·전체 0.87%)를 운영하는 학교도 전국 총 1521개교(12.4%)로 조사됐다.

반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조사 시점까지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한 냉·난방기는 총 29만494대다.

이는 2019년 10만2298대에서 2020년 9만6516대, 2021년 6만496대로 매

<17개 시도별 냉·난방기 사용연수와 연도별 설치 현황>

시도별	냉·난방기 설치대수	사용연수 12년 이상 (교육부 제안 교체 기준)		사용연수 20년 이상		연도별 냉·난방기 교체신규 설치대수			
		운용대수	비율	운용대수	비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충북	62,284	32,171	51.65%	14,145	22.71%	4,730	3,578	1,695	737
인천	76,416	36,996	48.41%	4,287	5.61%	4,277	3,203	3,356	1,244
서울	188,707	86,856	46.02%	8,138	4.31%	12,813	14,897	7,610	2,928
대전	36,849	16,488	44.74%	1,049	2.84%	1,804	1,802	1,674	958
경기	337,285	122,315	36.26%	26,367	7.81%	24,932	22,118	15,009	9,288
대구	56,476	20,393	36.10%	2,927	5.18%	4,196	5,418	3,022	687
광주	33,674	11,535	34.25%	542	1.60%	3,557	2,465	1,523	732
경남	78,654	26,697	33.94%	2,586	3.28%	6,679	6,373	3,309	3,118
울산	27,357	9,227	33.72%	466	1.70%	1,795	1,835	1,488	982
부산	61,753	20,651	33.44%	1,854	3%	3,564	3,837	1,503	591
전북	60,229	17,770	29.50%	4,479	7.43%	7,798	5,107	2,669	941
전남	63,977	17,693	27.65%	3,326	5.19%	4,292	5,261	2,704	1,256
경북	80,245	21,711	27.05%	4,247	5.29%	7,895	8,529	6,345	1,725
강원	54,024	14,263	26.40%	3,479	6.43%	5,223	3,280	3,054	1,758
제주	15,679	4,058	25.88%	246	1.56%	1,612	3,141	1,297	483
충남	62,554	14,434	23.07%	2,553	4.08%	6,211	4,590	3,641	3,484
세종	13,133	724	5.51%	67	0.51%	774	1,079	461	269
*국립	8,462	5,400	63.81%	1,097	12.96%	146	3	136	3
전국	1,317,758	479,382	36.37%	81,855	6.21%	102,298	96,516	60,496	31,184

* 교육부 제출자료 재구성
* 국립학교(교대·사범대부설 초·중·고, 국립특수학교 등)

년 감소세다. 올해는 3만1184대를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활용해 학교 교육환경개선비 명목으로 냉·난방기 교체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하고 있다. 2019년 1500억원, 2020년 1913억원, 2021년 3060억원이 교부됐다.

서 의원은 "학교 현장의 냉·난방기 교체 예산이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노후화된 시설의 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며 "윤석열정부가 교육교부금 축소를 이야기하기 전에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환기자



나주경찰-동신대학교, 성범죄 예방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나주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신학기를 맞아 한달 간 교내 불법촬영 등 성범죄 불안감 해소 및 홍보 활동 강화를 위해 온 오프라인으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나주=송준표기자



진도119생활안전순찰대, '안전전남' 향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가 안전한 전남, 안전한 진도를 향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완도119생활안전순찰대, 금일읍 소량도 '비상구급함' 설치

완도소방서(서장 김옥연) 119생활안전순찰대는 금일읍 소량도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일반 상비약 및 의상처치 물품이 포함된 '비상구급함'을 설치하였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장흥소방서 장흥119안전센터, 방치 청렴 교육 실시

장흥소방서 장흥119안전센터 소방경 강주용은 청렴한 소방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 방지 청렴 교육을 실시 하였다.

장흥=김도영기자



담양소방, 이동안전체험차량 소방안전교육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14일 금성초등학교 및 옥과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하여 찾아가는 체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광주 동부소방, 병·의원 등 입주건축물 소방특별조사 실시

광주 동부소방서는 병·의원 등 입주 건축물 특별 화재안전대책 일환으로 관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학동 참사로 이어진 재개발 복마전 비위' 조합장 등 2명 구속영장

조합장·정비관리업체 대표, 각종 이권 주고 받아



경찰이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각종 비위를 주도한 조합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 조모(75)씨와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 성모(66)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학동 3·4구역 재개발 조합장을 잇따라 맡은 조씨는 관리업체 대표 A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게 2억여 원 상당 용역을 발주토록 도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3구역 재개발사업 과정에서는 무허가 업자로부터 조정용 나무를 부풀린 구입 단가에 사들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3구역 사업을 마친 직후 잔여 입주 세대(보류자) 2개를 무상으로 받아 조합 이사와 나는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성씨는 도시정비사업자로서 학동 4구역 내 '백화마을' 내 광주시 소유 주택을 무허가인 것처럼 꾸며, 거처 언다시피 한 분양권을 조씨 일가와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백화마을은 1946년 광주를 찾은 백범 김구 선생이 전재민(戰災民)들을 위해 성금을 기증해 세운 마을로, 사업 직전 공·폐가로 방치돼 시가 관리됐다.

경찰은 조씨가 조합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용역·구매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 관련 업체들과 대가성 금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9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인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고 8명이 크게 다쳤다. 본격 수사에 나선 경찰은 참사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시공사(HDC현

대산업개발), 하청·재하청 업체(㈜한솔·다원이앤씨·백술) 관계자와 감리 등 7명(5명 구속)과 해당 법인 2곳을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지난 7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각기 징역형과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들어 항소했다.

조합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통해 브로커·조합·각종 용역 업체 관계자 총 31명을 입건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4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조씨와 성씨에 대한 신병 처리를 마치는 대로 나머지 25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조씨 등 2명에 대한 신병 처리를 끝으로 학동 붕괴 참사 관련 조합 비위 수사는 마무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조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기동취재본부

태풍 틈타 골목 '차량 털이' 50대 남 구속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관통하는 와중에 도시 곳곳을 돌며 차량털이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56)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심야시간대에 포항시 남구 일대에서 주차된 차량 안에 있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골목에 주차된 차량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총 25대의 차량 중 7대에서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불과 한달여 전 출소해 직업이나 주거지가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귀중품을 차 안에 두지 않아야 한다"며 "차에서 내릴 때 반드시 차 문이 잠겨 있는지도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스



윤석열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 대통령령 폐지를 촉구한다.

산구 전경기념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 폐지 추진 규탄 반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시민사회활성화 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용